‘강부자 내각’ 파문 이어 ‘삼성 떡값’ 수수 의혹

곤혹스러운 이명박 정부

취임초 잇단 악재… 靑 ‘선거 개입’ 논란도

출범 보름도 안 된 이명박 정부가 온갖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 등의 비판 속에 임명된 주요 장관 내정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다가 이미 세 명을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의 거취 문제가 야당의 반발 속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도 부적격 논란에 휘말렸다. 내정자는 중립성 훼손 우려 인사로 지적됐고 김성호 내정자는 이종찬 민정수석과 함께 ‘삼성 떡값 수수’라는 초대형 의혹까지 받게 됐다.

김 내정자와 이 수석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의혹에서 쉽게 벗어나긴 힘들 듯한 분위기다. 7일 개최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권의 강력한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종찬 수석 역시 영남 출신의 ‘사정 라인 핵심’이란 점에서 청와대의 곤혹감은 더하다.

청와대가 즉각, 다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동관 대변인은 “길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미친 사람이라 하고,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거론된 의혹들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은 “부정부패와 싸워야 할 수장들이 오랜 기간 재벌의 떡값을 받아왔다”며 자진 사퇴와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6일 “이른바 ‘고소영’ 정부에 이어 ‘부동산 부자 내각’, 이제는 ‘떡값 정부’라는 말을 듣게 돼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방송 통신 장악 음모”라며 아예 청문회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고 있고, 언론 시민단체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내각 부실 인사’ 파문으로 한나라당에 위기 의식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 내 측근 의원 2명을 연이어 불러 한나라당 공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 악재’가 연거푸 터지고 있는 것이다.

6일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이 대통령이 5일 정두언 의원과 박형준 의원을 청와대로 연이어 불러 총선 공천 등 당 운영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날 회동의 성격과 관련, “총선공천과 관련해 컨셉트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해 기획력이 있는 당 소속 의원들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에게 총선에 대한 컨셉트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는 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옮겼다.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즉각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이제 막 취임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 의회권력 장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개혁공천’ 수위는 통합민주당측의 ‘개혁공천’ 바람이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에서도 도덕성 논란 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안강민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개혁공천’에 한나라 ‘좌불안석’

‘과반 의석’ 확보 위기감 고조… 영남권 공천 ‘물갈이’ 주목

민주당 발 개혁공천 돌풍이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개혁이미지로 뜨는데 반해 한나라당 공천은 구태의연한 계파 나눠먹기로 낙인찍히면서 수도권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6일 “한나라당 공천은 최고위원회가 심각한 하자가 드러난 공천자를 두 번씩이나 공심위에 돌려 보내야할 정도로 기준과 원칙 없이 계파 위주로만 진행되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 공천심사위의 (비리전력자 공천 배제) 결정은 민주당에 크게 플러스 되고 한나라당엔 악재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지금과 같은 공천양상은 계파 간 이해 등 당내 논리에만 매몰돼 국민의 요구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이런 구태가 계속돼 제대로 된 물갈이에 실패한다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게 뻔하다”고 말했다.

공심위 내부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더한 상황이다. 공심위원인 이종구 의원은 “국민적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개혁과 테마공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마공천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이미지에 걸맞은 경제전문가들을 전략 공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공심위원은 계파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영남권 공천과 관련 “17대 총선과 같은 높은 수위의 물갈이는 어렵겠지만 (물갈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우리 공천이 더 개혁적”이라는 해명을 내놓아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당내에서조차 눈총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부터 국정원장 등 인사청문회 쟁점과 전망

‘인사 파동’ 공방 2라운드

野 ‘삼성 떡값’ 전방위 공세…‘편향인사’ 문제 제기도

7일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의 내각 후속 인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벌써부터 여야간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상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1차 인선에서 낙마한 이춘호 여성,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제2의 인사파동’으로 규정하고 내각 인선파문의 불씨를 살려간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4·9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청문회를 건전한 검증의 장이 아닌 부당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는 7일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를 필두로 10일 김하중 통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2일 변도윤 여성부 장관 후보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당장 7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김 후보자를 ‘삼성 떡값’ 검사로 지목함에 따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폭로 당사자인 김용철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범으로 처벌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한 방송과의 통화에서 “7일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출석해서 뭐하느냐? 나가나 안 나가나 명예훼손과 위증 혐의로 고소당할 것”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에 이어 김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사정라인이 모두 영남인사로 채워진다는 ‘편향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장관 재직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냈던 김 후보자가 새 정부에서 곧바로 국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춰볼 때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김 후보자의 재산이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부분, 차남의 병역 면제 과정 등 신상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간 입장차가 맞서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17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특별한 사유없이 청문회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라며 12일을 주장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한, 이규택 등 현역 5명 공천 탈락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6일 4·9총선 후보 공천심사에서 4선 중진인 이규택 의원(경기 이천·여주)을 비롯한 5명이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공심위는 이날 경기와 제주 지역에 대한 2차 심사에서 윤건영 의원(경기 용인 수지) 등 3명의 현역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총선후보가 내정됐고, 현역 의원 5명이 탈락했다고 공심위원인 임해규 의원 등이 밝혔다.

이규택 의원 외에 탈락한 현역 의원은 한선교(용인 수지), 이재창(파주), 고희선(화성), 고조흥 의원(포천·연천)이다.

이로써 한나라당 총선후보 내정자는 최고위원회 확정 보류자를 포함해 128명으로 늘어났다.

탈락한 현역 의원 가운데 친(親) 박근혜계는 이규택, 한선교, 고조흥 의원 등 3명이고, 친 이명박계는 이재창, 고희선 의원 등 2명이다.

경기 지역 총선후보 내정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현역의원은 윤건영 의원과 파주에서 이재창 의원을 꺾은 황진하 의원,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 등 3명에 그쳤다.

윤 의원과 정 의원은 친이, 비례대표 출신인 황 의원은 친박으로 분류된다.

원외 인사 중에서는 이천·여주에서 이범관 전 광주고검장이 이규택 의원을, 포천·연천에서 김영우 전 당선인 비서실 기획부실장이 고조흥 의원을, 화성을에서 박보환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이 고희선 의원을 각각 물리쳤다.

이 밖에 이진동 전 조선일보 기자(안산 상록을), 김성회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화성갑) 등 14명의 원외인사가 경기 지역 총선후보로 추가 내정됐다.

제주도의 3개 지역구는 김동완 북제주을 당협위원장(제주갑), 부상일 제주대교수(제주을), 강상주 글로벌제주연구소 이사장(서귀포)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다. /연합뉴스

“표적공천 납득 못해”

박근혜 전 대표 비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6일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측근들의 공천 탈락과 관련, “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 의원 탈락을 포함한 공천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동안 제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정현 공보특보가 전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여론조사 결과로 보거나, 의정활동에도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를 도왔다는 이유로 탈락을 시켰다”면서 “이런 것은 표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가 공심위 심사 결과를 사실상 보복공천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결과가 공천 물갈이를 둘러싼 계파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 개원 40주년기념 2월 3월반 특별이벤트 =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률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합격신화!!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

새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롬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관, 황경애)
개강 3월 3일 합격 국비무료
새롬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영어교사 양성과정 입학생모집
영어교사 23000명 내년부터 채용!
TESOL
센츄럴 대학교 TESOL 석/박사
세든 크리스찬 대학교 TESOL 석/박사
아메리칸 리버티대학교 TESOL 석/박사
TESOL 자격증과 학위증서 同時취득!
TESOL 아메리카 센터
www.tesolamerica.com
www.tesol.tv
062-222-6253